

# 달라진 대통령 메시지... 이념·관례 깨고 민생·협치 물꼬

이재명 대표를 비롯 범야권 회동 민생타운홀 등 현장 목소리 청취 향후 거부권 행사 여부 이목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 현장' 행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현장으로 나갔고, '이념'에 초점을 맞췄던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민생'에 중점을 두는 모습으로 변화했다.

5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대통령실 참모들은 용산 대통령실 밖으로 나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등에게 들은 민심을 참모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이 지난 한 주간 내놓은 메시지도 민생 중심이다. 지난 3일 소상공인 대회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소상공인 대출 총액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호소에 대한 응답이다.

또 지난 2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우려를 적극적으로 달래기 위해 대전에서 신진 과학기술 연구자를 만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의정실에서 김진표 의장 등 5부요인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시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1일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택시기사로부터 카카오 택시에 대한 비판을 듣고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하거나, 은행권을 향해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특히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문제는 참모들이 직접 민생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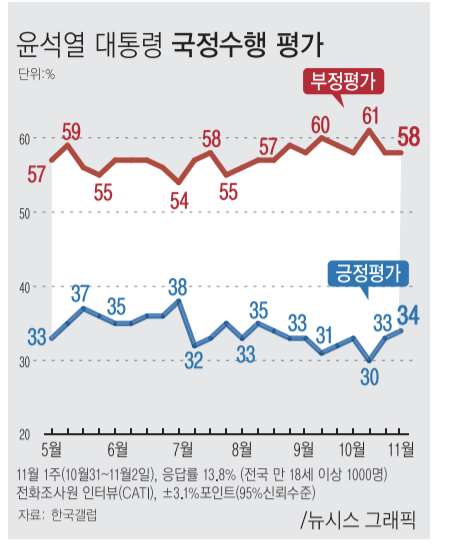
그간 윤 대통령의 행보는 '독선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여소야대 국회 상황 속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 연달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 모습에서 '불통'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 등 이념에 초점을 맞춘 발언은 논란을 빚었다. 이념 중심의 발언은 정부가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

판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중도층은 민생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념에만 천착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흥분도 장군 흥분을 이전하며 발생한 논란 역시 중도층에 피로감을 더했다.

그러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보도 달라졌다. 지난달 31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웃으며 악수하거나,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의 '쓴소리'도 경청했다.

연설문 초본에는 여야 손으로 부르던 관례를 깨고 "함께해주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이라며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메시지 측면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념과 관련한 내용이나 야당을 비판하는 문구 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민생 행보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야당과도 계속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때문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이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5대 은행, 올해 기업대출 60조 '썩썩'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기업대출 집중 경기부진 지속... "리스크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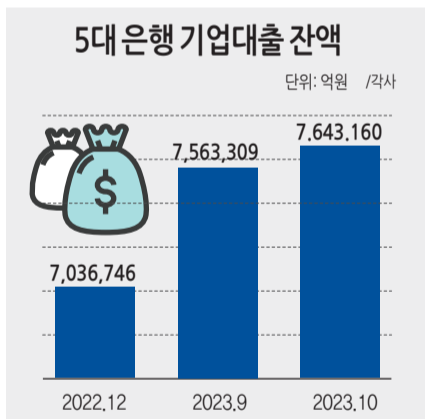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이 올해 들어 60조원 이상 증가했다. 회사채 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대출을 찾는 기업이 늘었고, 가계대출이 규제가 강화되자 기업대출을 늘리려는 은행이 증가한 까닭이다. 다만 고금리 상황 속 경기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기업대출 잔액은 764조3160억원으로 한달 전(756조3309억원)과 비교해 7조985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703조6746억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 10개월만에 60조6014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기업대출, 대기업 중심 증가  
기업대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5대은행의 10월말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7조3492억원으로 전달(132조9907억원)보다 4조3585억원 늘었다.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 7월 2조9979억원 증가한 대기업 대출잔액은 8월 3조1949억원, 9월 3조586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1조8884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 기업대출 증가액의 52.6%를 차지한다.

이는 대기업들이 회사채보다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928%까지 떨어졌던 회사채(무보증 3년·AA-기준) 금리는 이달 3일기준 4.789%까지 0.



861포인트(p) 올랐다. 은행 대기업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9월 기준 연 5.18%다.

은행권 관계자는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금리가 비싸더라도, 금리가 낮아지면 바로 갈아탈 수 있는 단기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며 "회사채는 기본 만기가 2~3년이지만, 은행 기업대출만기는 보통 1년이기 때문에, 필요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은행들의 기업대출 경쟁이 심화된 영향도 컸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규제를 강화하자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우량 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가계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말까지는 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리스크관리, 운전자금 중심 강화 필요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대출을 늘리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금리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9월말 기준 연체율 평균은 0.29%로 지난해 말(0.21%) 보다 0.08%p 늘었다. 5대 은행을 포함한 국내 은행권 연체율은 지난 8월말 기준 0.43%를 기록하며 3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말 기준 0.47%로 6월 0.37%에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기업대출 등이 급증한 것도 연체율이 오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 대출의 질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늘어나는 기업대출은 주로 운전자금이다. 기업들이 조달하는 자금은 크게 회사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투자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2000년대 후반부터 계속해서 운전자금보다는 시설자금 조달을 공격적으로 늘려왔으나,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 들어서는 운전자금 목적의 대출금 증가율이 높아진 상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이자부담은 한동안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취약부분을 중심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기업대출 중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채비중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 정부, 연내 주요 쟁점 가이드라인 제시 "보호·이용 조화 이룰 수 있는 정책 수립"

>> 1면 '생성형 AI 저작권...'서 계속

다만 법원은 제기된 일러스트 중 일부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 학습 데이터셋이 갖는 저작권 침해성을 인정해 AI 업계가 술렁이는 중이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저작권기술 컨퍼런스(ICOTEC)에 참석한 매튜 새그 에머리대 교수는 데이터셋의 기밀성을 지적하며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학습 데이터셋이 저작권 논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모델 자체가 저작물을 침해하는 훈련 데이터의 복제품이자 저작물에 기초한 파생물"이라는 주장했다.

AI의 근원이 되는 LLM은 방대한 데이터셋 학습을 전제로 한다. 학습 데이터셋은 일반적으로 기존 데이터로 이루어진다.

지난 3월 메타가 논문을 통해 밝힌 생성형 AI 라마는 웹상에 공개된 데이터를 1조 4000억 토큰(token, 인공지능 데이터 단위) 분량 학습했고, 여기에는 커먼크롤 재단 데이터 67.0%, 깃허브 4.5%, 위키백과 4.5% 등 자료가 포함됐다. 오픈AI(OpenAI)에 따르면 GPT-3는 영어 위키백과, 신문기사 등을 선학습했다.

메타와 오픈AI 모두 세간에 공개한 학습 데이터들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익을 위한 자

료들이 대부분이며 개인이 작성했다더라도 다양한 이용에 대한 저작권 동의를 거쳤다.

문제는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있다. 학습 데이터셋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방대한 용량과 기밀성 등으로 일반인이 각 LLM의 학습 데이터셋에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한 정황에 결과에서 발견된다고 밝힌다.

우리나라도 아직 본격화한 않았으나 정부는 선제적으로 AI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끌어갈 방침으로 연내 주요 쟁점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 현안"이라며 "초거대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보호·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과 규범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